교육부 사학법 또 재개정 추진 논란

민주화 관련자 특채 등 신설

사학들 "자율성 훼손" 반발… 교육부 "확정된 것 아니다"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자율성 문제를 둘러싸고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했던 사립학교법을 또 다시 손질하려고 하자 사학들이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학법에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위촉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사학법 시행령 중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험방법 변경 등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들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는 등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학 개정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에만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을 고교 이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사학들의 반발이 크다. 특히 이 내용이 전교조의 요구사항인 점을 감안, 개정 배경에 학교법인 및 학교장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까지 교육부에 전달했다.

사립교원의 임면 정의 부분도 교육부는 신분 변동이 오는 '신규채용, 승진, 겸임, 강임, 휴·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도지만 사학의 생각은 다르다.

사립학교 과원교사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과원교사의 경우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대비한다는 취지지만 이미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 과원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고 있어 특별조항이 설치되면 시·도교육청이 대상을 대폭 축소해 해당 인원만큼 사학이 떠안게 되므로 불필요한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제한된 인원에 대해 특별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사학들이 수용할 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신규채용 교원의 시험방법을 고치는 문제와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는 부분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정부가 사학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시기도 그렇고 합의가 어려워 불씨만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달 초 마무리된 사학법 재개정 추진과는 별개로 진행해 오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광역단체 공약이행도 전남 전국 2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4기 1년 평가

"광주는 계획단계 사업 많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민선 4기 1년간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전남도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평균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공동대표 강지원·김영래)는 6일 오후 국회 브리핑실에서 '민선 4기 1주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남도는 97.2점을 얻어 경기도(98.7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시는 93.0점에 그쳤다.

그러나 실천본부측은 "90점 이상은 우수한 이행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자치단체별 점수는 절대평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즉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9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상태에서 점수에 따른 순위차는 통계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공약이행도는 각 광역자치단체별 전체 사업 가운데 지난 6월말 기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에서 차감하여 산출됐다. 예를 들어 공약사업이 100개인 경우 1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1점을 빼는 방식이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울산광역시, 강원도와 함께 5·31 지방선거때 약속한 공약들을 빠짐없이 이행계획서에 담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 사례로 꼽혔다.

다만 광주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탓에 계획 중이거나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이 많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 민선 4기 공약사업은 모두 43개였으며, 27개 신규 사업 가운데 16개는 '계획(용역)중', 5개는 '추진단계', 6개는 '시행 중'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선거공약이 100~200개나 되는 시·도는 목표 미달에 따른 차감 점수폭이 작은 반면 광주는 비중이 높은 공약 43개를 집중 관리하고 있어 점수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감점을 당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평가는 실천본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매니페스토 지역단체 등이 공동 평가단을 구성, 각 자치단체로부터 5·31 당시 발표 공약과 공약이행계획서, 자체평가서 등을 제출받아 지난 5월 중순부터 80일동안 실시했다. 실천본부측은 "광역단체장의 전체 공약 1천718개 중 27.2%가 계획 또는 준비단계에 있어 향후 3년간 공약이행을 위한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기말 공직기강 다잡기

■청와대 김성호 법무장관 사의 수용 배경

코드 벗어난 잇단 발언에 교체된 듯

지난달부터 '경질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고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양상이 반복되던 김성호 법무장관의 거취가 결국 교체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김 장관이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이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사의표명 사실을 공식화했고, 곧바로 청와대는 사의표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청와대는 "본인의 사의표명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경질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질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 교체설의 출발은 수개월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와대의 정책기조나 방침과는 어긋나는 듯한 김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이 발단이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외부 강연 등에서 경제 정책 라인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친 기업적'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지난 5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때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6월11일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는 "법무장관으로서 선거법 9조가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 '경질설'까지 불거져 나오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내부 논의끝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다"는 쪽으로 결론짓고 일단 넘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김 장관의 누적된 '실언'들은 올 하반기중 예상되는 일부 부처 개각시에 김 장관을 교체시킬 수 있는 사유들로 점검됐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부패방지위,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등을 거치면서 부패척결 제도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장관이 발탁됐지만 '코드'면에서는 청와대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같은 김 장관의 언행이 임기말 공직사회의 기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왼쪽)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후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의원

당 경선 39표 얻어 당선

대통합민주신당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출신인 김효석(담양·장성·곡성)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신당 소속의원 85명 중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39표를 얻어 원내 제2당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 김 의원과 경합한 강봉균 의원은 28표, 이석현 의원은 7표를 각각 얻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낙연 의원 등 4명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민주신당 창당을 위한 결정적인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사를 통해 "신당을 '잡탕정당'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순혈성을 갖고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며, 다원화 시대에서 오히려 잡탕이라는 것이 강점"이라며 "이 정도 이룬 것만도 성공이며 대선에서 성공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양형일 의원은 의원 전원을 후보로 삼아 1차 투표를 실시한 뒤 상위 2~3명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르는 '교황 선출방식'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민주신당은 시민사회세력의 대표자격인 오충일 대표, 민주당 출신 김효석 원내대표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출발하게 됐다. 사무총장에는 유인태 의원이 거명되는 등 후속 당직 인선에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들의 몫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효석 원내대표 프로필

합리적 성품의 정책통 재선의원. 중도통합민주당 내에서 범여권 대통합파로 활약하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에 참여, 민주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중앙대 경영대학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지내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권노갑 고문의 경제분야 '가정교사'를 했던 인연으로 전문가 영입 케이스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계진출 이후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의장을 거쳤으며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인제 후보를 밀었으나 경선이 끝난 뒤에는 노무현 후보의 경제분야 정책자문을 담당했다.

2003년 민주당 분당 당시 민주당에 잔류,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이겨내고 재선에 성공했다. 부인 김미경(57)씨와 1녀.

▲장성(58) ▲서울대 경영학과 ▲중앙대 경영대 교수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16·17대 의원